

地方都市 세미나 會議錄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이 資料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評價와 南北間에 進行되고 있는 各 分野
別 會談의 推進方向에 대한 意見을 收斂
하기 위해 1989. 10. 27 - 11. 14 사이에
7個 地方都市에서 學者 및 言論人을
中心으로 實施한 세미나 結果를 冊子로
發刊한 것입니다.

목 차

1. 제1차 세미나 (대구)	-----	3
2. 제2차 세미나 (부산)	-----	15
3. 제3차 세미나 (춘천)	-----	31
4. 제4차 세미나 (인천)	-----	51
5. 제5차 세미나 (대전)	-----	65
6. 제6차 세미나 (광주)	-----	77
7. 제7차 세미나 (전주)	-----	91

제 1 차 세 미 나

1. 일반사항

○ 일 시: 1989년 10월 27일

○ 장 소: 대구 (동대구 관광호텔)

○ 참석자:

이정희 (경북대 교수)

금종우 (")

강삼원 (계명대 교수)

전용헌 (")

신상준 (대구대 교수)

변재옥 (영남대 교수)

홍건석 (밀양전문대 교수)

전동호 (경북실업전문대 교수)

이상관 (대구매일신문)

박영규 (대구문화방송)

서극성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심용창 (남북대화사무국 대화기획부)

2. 토의내용

< 서 금 성 >

먼저 남북대화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국회회담의 경우 형식, 운영방식, 의제 등을 협의중에 있으며 상당한 부분이 합의될 것으로 보이나 운영방식이 쟁점사항으로 남아 있음. 또 고위당국자회담이나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의 경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나 실현가능성은 있다고 보겠음.

오늘의 토의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과 남북관계 발전방향 내지는 대화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이 상 관 >

새 통일방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봤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함. 처음에 대통령이 새로운 통일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한후 조금 진취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음. 예를들면 연방제적 성격이라든지, 그런걸 기대했는데 지난번 공안파동 이후 상당히 경화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함.

오히려 북에 대응하는 방안의 측면이 아닌가 함. 민족회합민주통일방안과 그 골격은 같아 보이나 중간과정이 좀더 나은것 같음.

좀 참신한 방안을 기대한 시각에서 보면 조금 아쉬우나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북에 상응하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강 삼 원 >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수렴했느냐 하는 것임. 기록상으로는 광범위한데 국회청문회 10여일 이후 발표했다는 것은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운 감이 있음. 예를들면 4개 정당들의 통일방안을 잘 수렴해서 4당에서 협의, 국회차원에서 국민적 합의로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임. 상당히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그러한 점이 아쉬움.

또 막후접촉 등을 통해 북측에 어느정도의 동의를 얻는 경우가 있었다면 더욱 금상첨화였을 것임.

< 홍 건 서 >

새 통일방안도 민족회합민주통일방안을 보완했다는 측면이 강함. 언례행사라는 선입관에서 보았는데 조금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은 남북연합, 통일평화시, 민주공화국의 중간형태를 제시한 점은 잘 된 것 같음. 정책입안을 위한 여론수렴의 과정이 좀 졸속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점임.

< 전 동 호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독일의 동방정책을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함. 독일의 경우는 베를린과 같은 민족거점 도시가 있음. 우리가 70년대에 본격적으로 남북대화가 열리게 된 이후 판문점이 독일의 베를린처럼 민족공동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다면 가능할 것임.

< 신 상 준 >

새 통일방안과 민족회합민주통일방안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같은 골격임. 남북 양체제가 갖고 있는 이념차로 볼 때 어려운 것이 아니냐, 통일방안이란 정치이데올로기 측면이 강한데 통일의 실현에 대한 진정한 의도 보다는 국민들에게 하나의 꿈을 주는 정치적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그리고 예술단 교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당히 이질화된 예술문화는 상호 교류를 통해 동질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비정치적인 회담이 더욱 활성화되고 교류가 되어 민족적인 동질성, 감정적인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 금 중 우 >

각계각층에서 의견이 일치되고 모두가 잘된 것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가지 아쉬운 점도 있음.

북한의 변화도 빨리 기대할 수는 없으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우리는 예술·기타 그런 범위의 교류를 통해 북한 동포에게 조금이라도 옛날의 전통적인 문화를 회상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측면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면 세계적인 호응도 얻게 될 것임.

< 이 정 혁 >

대한제국 이전까지 올라갔을 때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였음.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민족적 입장에서 공동체 원리가 나와야 함. 기능적 분야별 통합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생성된 이후에서야 남북간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

정상회담의 경우도 사다트·베긴, 동서독 정상회담의 경우와는 다름. 남북연합에 대해서도 북한이 이의를 제기할 것임. 국가연합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임. 방법은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 실질화된 체제를 동질화 시킬 수 있는 것에서부터 접근하는게 좋겠음.

< 신 상 준 >

새 방안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함. 새 방안이 민족회합민주통일방안과 별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점인데 내 생각에는 새 방안이 민족회합민주통일방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 북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임. 아직까지는 대결과정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상태임.

통일방안의 접근은 저쪽의 양보를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으면 정말 양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무얼 하느냐 하는 것임. 또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 나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음. 새 방안의 내용은 남북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는 연속적인 기구로 봄.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이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민족통일협의회를 두고 여기에서 통일헌법을 만든다는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있음.

그다음 공동체의 성격이 무어나, 국제법상의 권력을 부여받은 주체라고 볼 수 있음. 그런 점에서 EC와 남북관계를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음.

< 이 정 의 >

이 문제를 EC와 관계지어서 남북연합을 생각하면 문제가 생김. 두 국가가 국제법상 협약으로 맺어진 것이 국가연합임. 남북연합을 북한은 두개조선 조작책동의 일환 운운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을 EC국가연합과 남북관계를 결부시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전 용 헌 >

이데올로기가 쌍방이 다른데 문화적, 역사적 동질성을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먼저 연결한 다음에 정치적 연결을 시도해야 실현가능하고 국민들도 믿게 될 것임.

남북문제 접근 방향은 정치적인 면보다 문화나 이런 부문에서 먼저 접근해야 함. 그러면 국민들의 통일이나 민족에 대한 의식도 높아질 것임.

< 박 영 규 >

우리가 독일에서 배울게 있다고 보는가? 베를린과 같은 민족거점 도시가 우리는 아쉽다 하는데 나는 거꾸로 생각함. 나는 독일의 통일을 강대국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느낌을 받았음.

재독 교포들의 말을 들어 보면 무섭다는 것임. 『나치즘이 되살아나고 있다. 외국인을 냉대한다. 매년 8-10%씩 나치주의자가 증가한다』는 것임. 그런데 베를린은 독일인들의 통합의지를 굳히는 구심점이 되고 있음. 베를린 장벽, 미·소군인들의 주둔모습 등에서 독일인들은 통합의지를 굳히고 있음.

그러나 역사적인 재앙을 의식하고 있는 불란서, 영국, 소련 등이 독일의 통일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

국민들은 새 통일방안에 대해서 잘 모르나 벌써 엄청난 효과가 있음. 종전의 반공교육은 토막극 형식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최근엔 북한의 선전영화를 TV를 통해 그대로 방영해 주고 있음. 그 결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을 연민의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음.

지난 남북한 축구시합을 보면서 국민들은 남의 북에 대한 여유를 느낄 수 있었음. 이런걸 볼 때 동질성을 굳이 안찾더라도 자연스럽게 동질성 회복을 위한 투쟁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임.

< 이 정 희 >

문화종속이 문제임. 이에 대해서는 방송, 신문도 책임이 있음.

< 박 영 규 >

민족의 동질성을 부르짖는 것은 항상 우리쪽임. 공산주의자는 민족의 동질성을 얘기한 적이 없음. 한일합방 이후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음.

< 신 상 준 >

문화적 동질성 추구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

< 박 영 규 >

이는 문화적 동질성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뜻임. 중국에 사는 동포들이 와서 TV나 언론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이런 책자 수만부 찍어서 배포하는 것 보다 훨씬 효과가 좋음. 회담을 통해 동질성을 찾자고 해서 뭐가 되겠는가? 통일원에서 교수님들 해외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함.

< 이 장 희 >

결국 쌍방간에 그런 바탕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면 더욱 금상첨화란 얘기임.

< 박 영 규 >

통일방안에 대한 접근에서 정치적 측면 보다 민족적이란 바탕을 강조하는 것도 일리는 있음. 그보다 먼저 밀바탕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게 중요할 것 같음.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들면 2차 고향방문단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만나본 이산가족들은 별로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임. 1차 때는 서로 갈려고 했었음. 그 이유는 만나고 온 친척들의 신변문제임.

1차 다녀온 사람들은 만나고 온 친척들의 근황을 미국교포들을 통해 다 듣고 있음. 그 사실을 전해들은 이산가족들이 방북을 망설이고 있으며 그 숫자도 늘어나고 있음. 이는 만나기 싫다는게 아니라 만날 시기를 기다리자는 것임. 아마 300명 구성이 어려울 지도 모르겠음.

< 변 재 옥 >

북쪽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3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그런데도 우리는 저쪽을 공격하는 것

이 없었는데 이번에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은 북의 아픈 곳을
찌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은 있음.

< 신 상 준 >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나누었음. 좀 더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이나 시간관계로 토의는 마무리 지었으면 함. 미진한 부분은
식사하면서 나누는 것이 좋겠음.

< 이 정 희 >

통일원 측에 건의사항이 있음. 이러한 기회를 좀 더 자주 정례적
으로 가졌으면 좋겠음.

제 2 차 세 미 나



1. 일반사항

- 일 시: 1989년 10월 28일
- 장 소: 부산 (부산일보사 스카이라운지)
- 참석자:

허 만 (부산대 교수)
이상민 (")
정대화 (")
천대승 (")
최무종 (동아대 교수)
김태희 (동의대 교수)
박용진 (부산공전 교수)
조경근 (경성대학 교수)
서극성 (남북대회사무국 자문위원)
심용창 (남북대회사무국 대회기획부)

2. 토의내용

< 서극성 >

새 통일방안의 입안을 위한 지난해의 여론수렴 과정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 통일방안에 대해 기탄없는 평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새 통일방안에 입각한 남북대화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만 >

오늘 간담회의 테마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임. 통일원에서 그동안 많은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성안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에서는 합의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세기 말의 국제환경은 한반도나 독일의 통일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의 흐름과 관련지어서 얘기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 전 대 승 >

과거 권위주의적인 관료체제하에서는 정부차원에서의 통일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차차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것 같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경우 좀더 발전적인게 나올 수 있음.

따라서 이것이 절대적이다 하는 식의 말은 하지말고 지금도 진전과정이라고 보는게 좋겠음.

< 정 대 화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함. 학문하는 입장에서 민족회합민주통일방안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음.

민족회합민주통일방안이 정상회담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새 방안 역시 마찬가지 임. 정상회담이 안되면 아무것도 안되나 논리적으로는 세련되고 발전되었다고 봄. 정상회담이 전제라고 볼 때 조건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점에서 동일한 맥락임.

정부가 실현가능성, 국민적 합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새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좀 약하지 않은가 함. 타당성은 있는것 같으나 국

민적 합의 역시 정부측에서는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임. 연방제를 미리 배격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움.

그리고 민주란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가치관인데 이런걸 왜 요구했느냐 하는 점도 있음. 또 인권이란 잣대는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해서 요구하는 것도 문제임. 선거를 통한 정권이 정통성은 있으나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능력이 있는가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의문임.

< 김 태 희 >

새 정부의 통일정책이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음. 작금의 정세는 동서간의 갭이 줄어들고 동·서진영의 관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변화가능성도 있다고 볼 때 우리의 방안으로 동조해 올 가능성도 있음.

민주원칙 보다 공산주의의 대칭은 자본주의인데 이 양자사이의 혼합체제로서 Welfarism 을 창조해서 통일의 사상으로 제시할 경우 북한의 동조가능성이 한층 더 높을 수도 있음.

우리가 자유민주적인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임하면 될 것임. 정상회담은 여유를 갖고 상대방의 요구에 동조해서 회담을 성사시킨 후에 회담에서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임.

< 이 상 민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양 측면에서 보고
싶음. 실현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음.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건 아니나 보완할 점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중
간단계인 남북연합이 연방제적 요소를 수렴하고 있는것 같고 단일 통
일민주공화국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즉 1민족 1국가 1체제로 최종
적 통일형태를 제시하고 있고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를 궁극적
통일형태를 제시하고 있음. 북한의 방안은 이런점에서 모순된 것이나
우리의 경우 이런 점은 아주 좋음.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실현성의 문제임. 남북연합단계에는 1:1의
공존개념이 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구비례의 총선거 정신이 들어
가 있는 바 민주주의 일반원칙상으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하나 북한
의 동의가 어려울 것임.

또 궁극적인 통일국가의 지도적 이념체계가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우리쪽의 것만 대변하고 있음. 북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념이 좀 부족한 것 같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우리의 자신감으로 볼 때 좀 더 북한에
대해 아량있는 성격으로 되지 못한 것 같음.

< 정 대 화 >

바로 총선거, 자유민주적 분위기가 풍기는것 이런 것은 보기에 따라 흡수통일방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것 같음.

< 허 판 >

자유, 인권, 행복이 우리만의 이상이나 하면 그렇지 않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같이 부르짖는 이념이라고 볼 수 있음.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견해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음.

< 박 응 진 >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공히 민족공동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체제다툼의 현상이 아니겠는가 함. 특히 아쉬운 것은 제도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발표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임.

방법론에서 다원적인 것으로 되는 것은 통일문제를 다루는데서 바람직하지 않음. 중간단계를 1민족 2체제로 보고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짐. 궁극적으로는 양쪽 다 1민족 1국가가 될 것으로 보여짐.

연방제 문제를 처음부터 터부시하는 접근을 지양했다면 중간단계의 설득력이 좀 더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임.

북한의 체제에서는 통일방안이 하나일 수 밖에 없으나 우리는 다원 사회인 만큼 여러개의 방안이 나올 수 있음.

북한이 통일방안에 접근해 올 수 있는 선행 여건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할 것으로 봄.

< 허 만 >

새 통일방안은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음. 북한은 상당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음.

< 최 무 종 >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쪽이 목표하는 체제가 타당하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양보할 필요는 없다고 봄. 시장경제 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음.

< 김 태 희 >

사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Social Capitalism 으로 가고 있고 소련도 자본주의를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스탈린주의와 김일성주의를 가미한 것으로서 유일하게 폐쇄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결국은 대세를 거역할 수 없을 것임.

언젠가는 북한이 우리의 방안에 따라 오리라 생각하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너무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봄. 예를들면 자유·인권 등을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더 움츠러 들게 하는 것임.

< 최 무 종 >

국가보안법 관계인데 내 생각으로는 이 국가보안법을 우리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하나 하나 예시하는, 즉 모든 사람들이 법률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법 제정의 원리중 개별적 지정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지금 교류승인 신청이 나오고 있는데 접촉이후의 상황이 바뀔 경우 법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있는 것임. 따라서 조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조 경 근 >

통일의 노력은 2가지로 나누어져야 함. 하나는 공개적 제의이고 또 하나는 막후 접촉임. 실현가능성이라든가 결실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볼때는 막후접촉이 효율적임. 이번의 새 통일방안은 공개적 제의의 방법임.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함.

미국의 전문가들의 인식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일관성의 결여 때문에 수세적 입장에 있다고 보고 있음. 정권적 차원에서 통일방안의 일관성이 해쳐져서는 안될 것임.

통일방안 모색과 더불어 분단극복의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다루면 좋겠음. 또 비공개적으로 북한에 뭘 좀 주었다. 도와주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아주 좋은 일임.

새 통일방안과 관련 국민적 합의, 실현가능성, 타당성이 중시되었다고 들었음. 국민적 합의란 국민의 호응을 얻는다는 것임. 통일정책은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중요한 요소임. 또 야당들의 호응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은 못한것 같음.

국민적 합의의 방법은 사소한 문제라도 북한과 타협해서 결실을 보게 된다면 국민들은 지지를 할 것임. 실현가능성 측면에서도 통일방안에 제시된 요소에서 실현가능성을 찾아서는 안될 것임.

비공개적인 접촉에 의해 사소한 것이라도 합의를 이룩해서 결실을 얻는 것이 실현가능성을 높여줌. 이념 측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민족주의임.

< 김 태 희 >

민족주의라 하면 배타적이란 개념도 있고 광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의 민족주의는 『한』 사상임. 『한』은 크다는 것인데 하늘 『天』임. 『天』은 『一』과 『大』임. 『한』 사상은 『원용무애』 즉 모든걸 포용한다는 것임.

< 이 상 민 >

북한이 김일성 주체사상 뿐인데 『한』 사상을 받아 들이겠는가? 통일에 민족주의를 강조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임. 통일방안 명칭에서는 『한민족공동체』라고 해서 민족개념이 들어있는데 실제 내용에 들어가서는 서구민주주의적 이념만으로 되어 있고 민족개념이 사라져 버렸음. 이것이 참 아쉬운 점임.

< 최 무 종 >

민족이란 말은 국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해의 가능성도 있음.

< 조 경 근 >

통일이 남북당사자의 문제이고 보면 민족개념을 주장한다고 할 때 외부적인 시각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봄.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되어서는 안될 것임.

< 허 만 >

민족주의란 통일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함. 한반도에는 공산주의적 민족주의와 자유민주적 민족주의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서는 통일이 불가능함.

통합민족주의란 화합을 지향하는 고유의 민족주의의 개념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음. 민족적 결합이 된다면 영토적 결합은 저절로 될 수 있을 것 같음.

< 이 상 민 >

통일원 측에 한가지 묻겠음.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궁극적으로 통일민주공화국이 중립화 통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서 극 성 >

그것은 없다고 보고 있음.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됨.

< 이 상 민 >

남북연합은 당국주도임. 평의회도 제도권 정당 소속으로 구성됨. 북한은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40여년간 줄곧 주장해 오고 있

는데 남북연합단계에서 사회단체들의 참여문제도 고려는 하고 있어야 할 것임. 북쪽의 의사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봄.

< 김 태 희 >

우리의 통일은 국민의 여망만 가지고는 안됨. 위정자가 희생적인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야 함. 이럴경우 지도자의 레지티머쉬(Legitimacy)가 성립이 됨.

70년대 유신정권때 박대통령은 남한의 모든걸 장악하고 있었고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였음. 그 때 양자가 통일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통일은 가능했을 것임. 그러나 그렇지 못했음.

< 정 대 화 >

정상회담의 진전이 잘 안되는 것은 경제적 공여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북쪽의 정치·군사적 요구를 우리 정부가 수락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음. 통일방안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허 만 >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음.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므로 결론 삼아 서위원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람.

< 서 금 성 >

고건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함.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처음 기초연구과정에서 여론도 듣고 해서 초안되었던 안과 발표된 안은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음. 체제연합 같은 것은 보수세력의 공격을 받기도 함. 인권문제 같은 것도 북한이 상당히 자극을 받고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 역시 너무 양보, 당하기만 한다는 일각에서의 반발도 있었기 때문임.

남북연합기구에 사회단체의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음.

제 3 차 세 미 나



1. 일반사항

○ 일 시 : 1989년 11월 2일

○ 장 소 : 춘천 (세종호텔)

○ 참석자 :

최동희 (강원대 교수)

문손재 (")

임봉길 (")

김정후 (")

박용수 (")

진장철 (")

전태국 (")

강치원 (")

김동주 (강원일보 논설주간)

김중석 (강원일보 논설위원)

윤경태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김웅희 (남북대화사무국 대화기획부)

2. 토의내용

< 운 경 태 >

제6공화국의 통일방안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난 9월 11일에 발표되었음. 동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기존방안의 경우와는 달리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킨다는 차원에서 각종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음.

그리고 최근 여러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를 새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각료회의와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북한은 『민족통일협상회의』 제의를 통해 우리의 통일방안을 토의하고자 하였음. 이는 얼핏보기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고려연방제가 최선의 방도임을 전제로 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의 새 통일방안을 남한내의 여러 통일방안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어 그 격을 격하시켰음.

따라서 오늘 이자리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와 최근 남북대화에 관한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임.

< 최 동 혁 >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새 통일방안에 대한 골자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음.

< 운 경 태 >

새 통일방안의 기본철학은 남북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면 그것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임. 즉 현재로서 북한과 교류·협력을 하게 되면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임.

그 공동체가 남북연합체임. 국가연합과 같은 법적개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연합하는 형태로서 EC와 Nordic과 같은 형태로 생각하면 될 것임.

남북연합단계의 과도기구를 규정하는 민족공동체 헌장을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하고 이것이 완성되면 10명 내외의 남북각료회의와 남북 각기 50명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가 있고 그리고 공동사무처 등의 과도기구가 설치될 것임.

그리고 통일에 이르는 단계에서는 남북한 총선거에 의해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임.

< 김 동 주 >

북한이 통일을 할려는 의지가 있을 때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지금의 국제적 환경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변하고 있음.

최근 소련은 우리의 UN가입을 반대할 의사는 없다고 했으며 또한 동유럽의 정치개혁의 바람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 통일방안은 긍정적인 호응을 얻을 것으로 평가됨.

< 최 동 희 >

남북연합을 과도체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남북간의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질화가 심화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이질화된 두 체제가 단번에 통일국가를 수립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뒷따르게 될 것이므로 과도체제 설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와 같은 남북연합은 북한이 궁극적인 통일국가라고 한 연방제는 사실상 과도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이러한 점을 수용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평화공존을 하면서 과도체제를 유지하느냐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문 경 태 >

지난 7. 7선언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은 현재 진행되고 있음. 그 후속조치인 남북교류협력 특별법이 아직 계류중에 있음.

정부는 이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만들어 추진하고 있음.

< 문 선 재 >

남북연합내용에는 교류차원 이상의 것이 담겨져 있는지, 다시말해 체제의 연합, 경제, 인적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 문 경 태 >

연공적 차원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교류협력 측면에서의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임.

< 문 선 재 >

체제의 절충이 없이는 통일의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함.

< 박 용 수 >

지난해 이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음. 그때도 언급을 하였지만 국토통일원 명칭을 바꾸자고 했음. 지리적, 물리적인 명칭이 아닌 민족통일원으로서의 개칭을 이야기 했음.

현 남북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문제로서 학술교류·경제교류 등도 있지만 군사문제도 매우 중요함.

남북경제가 날이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우리 경제는 몇년 동안 경제성장이 매년 10% 성장되는 반면 북한은 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국방비에 30% 이상을 편성하고 있는 북한은 파산할 가능성도 있으며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국방비의 과다 지출로 인해 그 존립한계가 머지 않아 올지도 모름.

따라서 남북관계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있음.

< 전 태 국 >

과거에 통일문제가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이용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음.

이제 우리는 『말형』의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임. 새 통일방안을 천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방안의 합리성, 비합리성을 떠나 단순한 연구보고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음.

제6공화국의 새 통일방안은 매우 훌륭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음.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함.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연합에 입각한 남북교류는 가능하지 않을 것임.

그리고 한반도 군사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임. 북한과 군사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표명이 중요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박 용 수 >

군사문제 논의는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즉 군사문제를 협상한다 하더라도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문제를 논의 하되 다른 분야의 대화와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북협상 측면에서 군사문제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임.

< 임 봉 길 >

남북통일이 남북한 당사자 문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 등 강대국의 개입이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며칠전 미국의 『시거』가 북한방문에 이어서 한국에 왔는데 이것이 3자회담의 사전작업이 아닌지 모르겠음. 그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력히 시사하였는데 미군철수 후의 군사문제 해결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할 것임.

< 전 태 국 >

통일은 민중의 심정속에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이제는 민중속에 통일의 가능성을 심어주는 홍보교육에 힘을 써야 할 것이며, 따라서 북한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게 북한의 노동신문, TV, 역사교과서 등을 개방해야 할 것임.

이러한 북한자료개방은 우리 체제의 우월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함.

< 진 장 철 >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풀어야 할 최고의 과제임.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통일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했는가 하는 반성을 해야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 생각함. 그러나 그 중 일부는 예를들면 비무장지대내에 평화구역 설치 등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나 정치구호적 성격을 띠고 있음.

이것은 남북각료회의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논의될 성질의 것인데, 미리 제시한 것은 통일문제를 정치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음.

그리고 7. 7선언에서 남북은 외교경쟁을 지양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북한의 외교정책에 우리 정부가 어느정도 협조했는지도 반성해야 함.

< 김 정 후 >

그동안 북한은 『선 통일, 후 평화』의 접근을 해왔고 우리는 그와 반대인 『선 평화, 후 통일』의 입장을 표방해 왔음. 이는 어떻게 보면 통일에 대한 단계적 접근의 입장으로서는 새 통일방안에 집약되어서 반영되었다고 생각함.

다만 문제는 북한이 우리의 새 통일방안에 동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임. 왜냐하면 통일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임.

북한은 정치·군사문제의 선차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교류협력, 민족동질성을 주장하고 있음.

연방과 남북연합이 비슷하게 보이나 새 방안에서는 과도체제를 거쳐 통일로 간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북한은 통일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50년대의 북한의 무력통일기도, 70년대의 체제수호적 차원에서 상호 불신을 하다보니까 자기체제를 강화하고, 80년대에는 남북대화를 통해 상호의 실체를 인정하는 단계에까지 왔음.

따라서 북한이 개방만 되면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무너질 것이라는 위협적인 발언을 하면 안될 것임.

어느 단계에 가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UN가입, 교차승인 등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새 통일방안의 미래상으로 자유·인권 인류 행복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회 구성에 있어서 양원제로 하면서 하원을 인구비례로 한다면 북한은 당연히 거절할 것임.

그리고 평화시 문제는 성급한 제시가 아닌가 생각됨.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북한과 협상을 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임.

< 박 용 수 >

남북간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임. 북한의 군사적 측면을 제외하면 즉 인민수준의 경제는 김정일 체제가 들어선 단계에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은 우리의 간접무역 방식을 희망하고 있을 것임. 우리가 폴란드에 4억불 차관을 제공하는데 오히려 북한에 차관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김 정 후 >

지난번 문익환·임수경 문제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함.

보다 넓게 생각하면 이들의 처리를 『질서법』 차원에서 처벌해야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면 남북의 모든 현안문제 해결들이 이 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 윤 경 태 >

백회점에 북한의 인삼술, 뱀술 등이 진열되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문익환사건이 터졌음. 7. 7선언은 누구나 마음대로 북한에 가도록 한 것이 아님. 휴전선을 넘어갈때 우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 즉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북한에 가야 하는 것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회에서 문익환사건을 남한의 내부적인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하고 있음.

우리는 대화의 진전을 위해 문익환사건 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나 북한은 모든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각 분야의 대화에 있어 실질문제 토의를 거부하고 있음.

< 진 장 질 >

이제 대북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함. 이는 결국 우리 내부문제와 직결되는 것임. 우리 체제의 민주화와 경제적 분배를 위해 노력하면 통일의 길은 더욱 가까워 질 것임.

< 문 선 재 >

역대 정권이 통일을 너무 부각시켰음. 즉 말로는 통일을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통일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음.

이번 새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또 하나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임.

< 김 정 후 >

동구권 공산제국의 개혁은 자유·인권·경제문제에서 비롯되었음. 우리는 자유·인권에 대해 자신감이 부족함. 북한보다 자유민주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보여줘도 관심을 텐데,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안 될 것임.

< 김 동 주 >

동서독은 공식적으로 통일을 포기하였음. 즉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있음. 우리도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라고 간주하면서 상호체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 동 희 >

휴전선이 국경선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함. 이는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함. 6. 23선언, UN동시가 입 등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1민족 2국가 라는 것임.

< 윤 경 태 >

서독의 기본법은 서독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나 우리의 헌법은 현실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북한까지 그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음.

남북관계에 있어 상호 인정하지 않으면 평화통일은 불가능한 것임. 우리는 북한을 국제법상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북한 역시 남한을 미식민지하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전 태 국 >

남북교류에 있어 적극적으로 해야함. 특히 학생교류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지난번의 경우 정부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음.

< 운 경 태 >

정부가 처음에 보내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학생들을 선발하였는데 북한은 이를 받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임.

< 김 중 식 >

최근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을 위한 회담에서 우리가 고향까지 가도록 하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지금 단계에서는 서울과 평양까지만으로도 교환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함. 우선 교환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남북간의 긴장완화 분위기조성에도 바람직하게 작용하게 될 것임.

< 강 치 원 >

체제와 제도의 변화가 쌍방간에 있어야 함.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수렴될 수 없다는 신화가 깨지고 있음.

정치적으로 민주화, 경제적으로 재분배에 남북 쌍방이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임.

그리고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해야 함. 이는 대내외적 조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임. 북한도 통일의 의지가 있을 때 통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임.

북한의 체제를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체제를 보다 과감한 체제 개방으로 나아가야 함.

문익환·임수경 등이 북한을 개방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함.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월한 체제임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문익환·임수경 사건을 잘못 처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임.

< 전 태 국 >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가칭 『민족화합 통일촉진법』을 마련해서 민족공지를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면서 교육내용도 반공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박 용 수 >

그런 것은 법률적 차원이 아니라 선언적 차원에서 해도 될 것이며 법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함.

< 김 정 후 >

그런 법은 NAZI식의 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 국수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윤 경 태 >

이제 북한에 가려면 국토통일원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최근 원광대, 경기대, 경희대 등에서 북한방문을 통일원에 신청해 놓고 있음.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지난번 한강연등제를 위한 회담에 우리측 대표들은 판문점 회의장에 나갔지만 북측은 끝내 나오지 않았음.

김일성은 신적인 존재임. 북한체제의 개방은 바로 이러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개방을 하지 못할 것임.

그러나 중·소를 비롯하여 최근 동구 공산제국의 개혁은 북한체제의 변화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김 정 후 >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브란트가 한국에 와서 연설을 하였는데 우리시민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겠는가? 문익환·임수경 사건은 『질서법』 차원에서 다루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체제의 수호는 더욱 굳건해 질 것이며 북한도 언젠가는 우리 체제에 굴복하게 될 것임.

< 윤 경 태 >

장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새 통일방안과 최근 남북대화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제 4 차 세 미 나

1. 일반사항

○ 일 시: 1989년 11월 9일

○ 장 소: 인천 (올림포스 호텔)

○ 참석자:

정천구 (인천대 교수)

은천기 (")

정규서 (")

김강영 (")

이태건 (인하대 교수)

백광일 (")

조태기 (인천전문대 교수)

이근철 (인천교육대 교수)

김성옥 (자유총연맹 인천지역 사무국장)

오경식 (인천직업훈련원 원장)

윤경태 (남북대회사무국 자문위원)

김웅희 (" 대회기획부)

2. 토의내용

< 운 경 태 >

이번 인천지역 세미나는 작년 새 통일방안 수립과 관련하여 실시한 세미나에 이어 두번째임.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1일 노태우대통령은 국회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천명하였음.

동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를 비롯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고견을 주시면 통일·대화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함.

< 장 천 구 >

금번 발표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토대위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저항감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새 통일방안은 통일지향에 대한 호소력이 부족한 느낌이 듦. 북한은 연방제를 최종 형태로 제시하면서 국호까지 붙여 놓았음.

현 국제사회에서는 남북분단의 현실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 방안이 지지를 받을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통일은 남북당국간에 합의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만약 남북이 합의를 하지 못하면 통일운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 것도 생각해야

함. 따라서 북한이 우리의 방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한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또 국민개개인이 통일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임.

<은 천 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기존방안 보다 매우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라고 봄.

북한의 정치·군사회담을 5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 것, 그리고 과도체제로서 남북연합을 제시한 것은 매우 설득력이 있음.

그러나 일반국민이 볼 때 이번 통일방안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함. 우리와 같은 지식인들도 민족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음. 그리고 남북연합을 Commonwealth로 영문표기를 하였는데 이는 좀 억지가 아닌가 생각됨.

따라서 이러한 용어를 일관성있고 체계있게 풀이를 해서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원에서 해주면 좋겠음.

민족공동체는 통일원장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는데 요즈음 각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 용어를 일관성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이 각양각색이며 심지어 심히 왜곡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또 통일의 미래상은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며, 국회구성에 있어 양원제는 잘 된 것이나 인구비례로 하원을 구성한다면 북한은 수용하지 않을 것임.

현 상황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새 통일방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우선적으로는 각급 학교에 해설책자를 배포하여 모든 학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음.

< 운 경 태 >

우리 통일정책의 기조는 남북총선거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음. 통일의 과도단계에서 남과 북이 협상하는 상황에서는 남북이 1:1이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는 단계에서는 남과 북의 개념을 떠나서 우리 민족전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임. 그리고 자유와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로서 이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임.

< 조 태 기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영문표기가 The Korean National Community (KNC)로 되어 있는데 이 영문표기에 의문이 감.

또 그 설명을 보면 한 민족 두 국가가 연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하나의 생활공간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지향하는 EC나 Nordic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하는데 EC나 Nordic에 대해 정확한 개념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우리의 통일방안이 아무리 옳아도 국민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임. 우리같은 교수들도 이들 개념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이들 개념이 통일방안의 설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

< 김 성 옥 >

저는 홍보차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이 분야에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함.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이해되고 있고 또 국민이 동 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동조해 주고 있느냐에 대해 의문이 있음.

최근 정부는 홍보방법을 활자화하여 이렇게 만든 새 통일방안의 해설책자를 몇만부 발행하여 배포하였다는데에 그 성과를 두고 있는 것 같음.

그러나 다만 이러한 숫자적 계산만 가지고 홍보가 잘 되었다고 보면 안되고 국민에게 설득력 있는 홍보를 해야 할 것임.

우리 현실을 보면 정부가 새 통일방안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각계의 통일방안이 또 나오니까 북한이 고려연방제와 함께 우리 남한의 모든 통일방안을 다같이 논의하자는 제의가 나오는 것임.

또 우리 통일정책이 분단 영구화, 고착화로 나간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개발해서 이런 주장을 봉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 오 경 식 >

해방 이후 지금까지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로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음.

통일문제 연구가들은 보다 자신있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해 주면 좋겠음. 최근 한민족체육대회 개최 등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으로 이해됨.

그리고 통일방안을 어렵게 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안되는 것임. 기존방안도 국민의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다 쉽게 설명한 책자를 개발하여 홍보와 교육을 시킴으로써 새 통일방안의 이해를 제고시켜야 할 것임. 그러면 학생들은 철부지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임.

< 이 태 건 >

정권이 바뀔때 마다 꼭 새로운 통일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대해 의문이 감. 물론 이번의 새 통일방안은 기존방안을 보완·발전시켰다고 하지만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됨.

통일의 원칙중에서 『민주』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함. 일부에서는 『민주』의 해석을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음. 따라서 민주개념을 진지하고 전향적으로 규정하는 해설을 덧붙였으면 함.

김동길교수는 자유만 추구한다거나 또는 평등만 추구해서는 결코 통일은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결국 자유·평등·민주 등의 가치가 종합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바탕위에서 통일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임.

그리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한다는 기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견지해 온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 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민족공동체나 남북연합의 개념이 매우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보다 충분한 해설이 필요함.

새 통일방안의 홍보면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임. 통일원의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직접 대중속에 뛰어 들어가 홍보를 하면 효과적일 것임. 또 TV나 신문의 컬럼을 사서 훌륭한 교수들의 글을 실게 하는 것도 홍보적 차원에서 좋을 것이라 생각됨.

< 운 경 태 >

신문의 고정난을 사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함. 대북성명문을 우리가 만들 경우 신문에는 단 한줄로 실리는데 아예 성명문 전체를 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았음.

< 정 규 서 >

누구나 통일을 이야기 하면서도 사실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 나이가 든 노인들 중에서 만약 통일이 되면 가정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임.

아직까지 정부가 불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봄. 다시말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이 이를 믿지 않고 있음. 따라서 정부안이라고 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을 감안하여 홍보를 해야 함.

그리고 새 통일방안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지지를 받는다면 더욱 국민의 공감대를 받을 것임. 그렇게 되면 정부의 안이 아니라 국민의 통일방안이 되는 것임. 국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로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임.

< 운 경 태 >

과거와 달리 이번 새 통일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특히 통일특위의 주관으로 국회공청회를 거쳤음. 그리고 방안발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 방식이 아닌 국회내에서 발표함으로써 형식상으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국민의 통일방안으로서 천명되었다고 봄.

그리고 각 정당의 통일방안을 보면 원칙, 과정 등 서로 매우 유사함. 다만 포장만 달리했을 뿐임. 만약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또 포장을 바꾸게 될지도 모름.

< 이 태 건 >

통일방안은 어느 특정한 정당의 집권과 관계가 없어야 하며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임.

< 조 태 기 >

저는 학교에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음.
첫째, 연방제는 기본전제로서 우리의 법률적 조건과 사회환경조성,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방안은 그러한 전제조건이 없음.

둘째, 통일국가의 비전으로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여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가치들이 보장되지 않아도 통일국가를 원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음.

셋째, 통일은 매우 어렵다는 것임. 연방제는 중간단계가 없는 것임. 연석회의라는 방식으로 수천명이 모인 군중집회식 회의에서 어떻게 통일안이 나오겠는가? 이와같은 질문에도 역시 학생들은 거부감이 없었음.

그리고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있는데 우리 방안에도 이러한 민족주의를 내포하는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음.

< 이 근 철 >

최근 체육회담에서 국기로서 한반도 지도를 그려넣자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만주도 우리의 땅이었는데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것을 찾을 때 곤란해 질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한반도 지도를 그려넣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윤 경 태 >

체육회담에서 나오는 깃발은 국기가 아니고 단일팀의 『단기』임. 이는 역사적인 국경선과 관계가 없는 것임. 그래서 독도를 포함한 3,000여개의 섬은 생략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제주도는 하나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포함시키고 있음.

< 은 천 기 >

그리고 『한나라』의 『한』은 한국할 때 『한』 이고 나라는 『국』 이니까 결국 『한나라』는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짐.

< 윤 경 태 >

『한나라』는 한글학자들이 지은 이름임. 『한』은 크다는 뜻이고 『나라』는 별세계, 꽃세계 할때의 세계로서 우주의 뜻을 갖고 있음.

< 백 광 일 >

지난번 『시거』가 하는 말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하나인데 우리 한국 내의 통일방안은 너무 많고 또 정부가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이야기 하였음.

단일된 통일방안이 될 수 있는, 즉 한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다는 제안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김 강 영 >

북한 및 공산권에 대한 많은 책자가 개방되어 있고 특히 노동신문을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돼서 그들의 궁금증이 해소되는 산교육이 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임.

기존방안과 새 통일방안을 보면 통일원칙에 있어 평화와 민주의 순서가 바뀌었음. 피상적으로 보면 말장난에 불과하겠지만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음.

< 운 천 기 >

자유중국은 통일에 대한 홍보가 잘되고 있음. 유치원부터 대학 및 사회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책자를 각 수준에 맞추어 제작·배포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음.

우리도 해설책자를 한 종류만 만들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 맞게 여러 종류의 책자를 제작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

< 운 경 테 >

오늘 장시간 동안 새 통일방안에 대한 평가와 남북대화에 대한 고견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세미나를 마치겠음.

제 5 차 세 미 나

1. 일반사항

○ 일 시 : 1989년 11월 10일

○ 장 소 : 대전 (유성관광호텔)

○ 참석자 :

조명현 (충남대 교수)

정기돈 (")

배상오 (")

신동호 (")

민동근 (")

김길락 (")

서해길 (")

손병기 (목원대 교수)

송인창 (대전대 교수)

유지문 (대전지역 평통협의회장)

최봉기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문대근 (남북대화사무국 대화기획부)

2. 토의내용

< 서 해 길 >

통일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 봄. 그런 관점에서 북한이 통일에 대해 진실한 의사가 있는가라는 근본문제가 중요함.

지금까지 남북쌍방은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특히 북한은 이중적인 기만술책을 구사해 왔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대할때 우리는 대형의 입장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한』자가 의미하듯 차원높게 정책을 추진함이 좋을 것 같음.

< 유 자 문 >

기존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후 5년이 지난때부터 이 방안은 진부한 감이 있었음. 북한은 근본적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남한의 총체적인 방안으로 보지 않은 것 같음. 그러나 한편으로 소련이나 중공 또는 북한의 비공식적인 언급을 볼때는 완전히 부정으로만 나오는 것 같지 않음.

사실 새 통일방안은 의견의 완전한 집약이 아니며 또한 그럴수도 없음.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동 방안이 좋으나 하는대는 의문임.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불가능하다고 생각
됨. 남북의 현 상황은 긴장상태임. 새 통일방안에서 중간과정을 두
어 교류·협력한다는 데는 수긍이 가고 연합기구에서의 동수개념은 합
리적이거나 현재의 남북긴장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임.

또한 새 통일방안이 군사적인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지 못한 점은
문제가 있으며 이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임.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주변국가간에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회의
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임. 덧붙여서 우리가 UN가입을 추구하
고 있으나 그러한 방법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시켜 볼때는 조금 늦추
어야 한다고 생각함. 북한의 고립이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한
반도 분단의 고착화를 추구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UN가입문
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

새 통일방안과 더불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많은 내용이 민족공
동체 헌장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서 해 길 >

남북한의 이질화의 심화로 인한 고리를 풀지 않고서는 남북문제 해
결은 어렵다고 봄.

< 조 명 헌 >

통일방안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천명된 방안 중 가장 종합적이고 설득력있는 방안으로 보는 것 같음.

이 방안은 이론과 실천면이 결합된 것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 좋은 방안으로 학자들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다만 이 방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두번째는 국민일반의 생각이 문제인데 사실 이 방안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외당게 접근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음.

통일문제가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때문에 이를 어떻게 국민일반이 실제로 느낄 수 있게 하는냐는 문제는 중요함.

예를들어 정주영씨의 방북같은 것은 국민이 비논리적이고 감정적이기는 하나 상당히 구체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임.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7. 7선언 같은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것이었으나 실제와 거리가 있어 정부의 통일의지를 불신하게 하고 있음.

통일방안을 홍보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은 그 방안을 구체화시키는 7. 7선언의 후속조치 같은 것임.

학생들의 차원에서 통일문제는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7. 7선언은 북한을 동반자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나 불가침협정 체결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확고하지 못하고 어떤 방향도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음. 이에 관한 확실한 방향제시가 있어야 할 것임.

새 통일방안에서의 통일평화시에서 남북산업박람회 같은 것을 열어 경제교류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고방단 인원 선발문제에 있어 지방에 있는 분도 많이 넣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통일안보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한다면 통일문제 홍보면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임.

< 민 동 근 >

신·구방안을 비교해 볼 때 새 통일방안은 진일보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의 구체적 실천이 중요함. (금강산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가 하는 것 등) 남북한을 비교해 볼 때 남한이 월등한 국력임. 따라서 동·서독에서와 같이 우리가 많이 베푸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한 배품이 축적되면 통일을 위해 큰 성과를 낼 것임. 지금 동·서독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볼 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봄.

예술단 규모에 있어서도 숫자에 구애될 필요가 없을 것임. 우리측은 체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 좋겠음. 그것이 개방을 촉구하는 방법임.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 북한의 여러 제안을 대폭 수용함이 좋겠음.

< 서 해 길 >

만약 우리학생 100명과 북한학생 100명이 왔을때 우리는 백화제방식인데 반해 북한은 한복소리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부측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신 동 호 >

새 통일방안은 과도체제를 두었고 과도기구를 둔 것임. 그래서 남북연합기구에서의 정상회담 등이 명실상부하게 설치되어야 동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과도체제의 중간단계는 상호 존중과 인정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함. 운동권학생의 일부는 북한체제 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음. 그들은 7.7선언 등에서의 동반자적 시각에서만 보고 상호주의적이고 상대적 입장은 무시하고 있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와 정책의 구현이 요망되고 있음.

< 김길락 >

새 통일방안에 대한 이북의 호응도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고 동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조치가 무엇인지 의문시됨.

학생지도차원에서 과격한 극소수의 소리가 커서 이를 무시할 수 없음. 이는 상대적 빈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위화감이나 계층의식이 통일에 장애요인으로 생각됨.

일본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초청장을 받았는데 북한이 참석한다고 해서 정부는 참가를 반대하고 있어 의아함. 우리가 중공, 북한, 일본, 대만 등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면 통일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주면 주었지 부정적이지 않을 것임.

중공에는 많이 가게하고 그런 회의에 못가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배상오 >

새 통일방안의 내용은 좋음. 그러나 여론을 많이 수렴했다고 하나 이후락이 평양갔다 온 후 7. 4 공동성명이 나오고 박철언이 왔다갔다

한 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으니 이것도 이러쿵 저러쿵하는 서툰 짓들로 보임.

국회에서 새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우리 자신이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서글픈 일임. 헌법상의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통일방안이 나오게 하든가 정치적으로 사후에 국회에서 이 방안에 대한 주인이라든가 새로운 합의를 거쳐 새롭게 의결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 요구됨.

국내에서 틀렸다. 북한에서도 안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걸돌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를 거쳐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해야 할 것임.

서울·중앙에서는 의견이 잘 수렴되었다고 하나 지방에서는 안되었음. 형식적인 여론수렴을 절차상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두번째는 통일원의 위상의 문제임. 예산이나 조직으로 볼 때 통일을 하자는 건지 의심스러움. 먹고 자는 것 면하고 이제 통일을 생각할 때가 되었으니 이에따라 통일원도 격상하고 인원도 보강해야 할 것임.

남북교류차원에서 자우간 많이 상호교류하면 할 수록 우리가 이기고 이익이 되게 될 것임. 조금 손해본다고 해서 근시안적인 정책은 곤란함. 너무 수지계산만을 따지지 말고 섰다하듯이 큰 마음으로 대화와 교류를 추진해야 함.

통일을 하고자하면 대화의 통제를 풀고 적극적으로 손해나는 장사를 해야 할 것임.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됨. 적십자 예술단 문제에서도 많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임수경학생문제도 대범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공안정국으로 얼음이 깨지면 안되고 얼음이 풀어지도록 해야할 것임.

대학통일문제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 줘야 할 것임.

< 손 병 기 >

첫째, 이념적인 혼란의 문제로 북한이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 입장에서 학생들을 설득할 수 없었음. 따라서 당국은 보수적 입장의 실망이 있게해야 함. 이런점에서 새 통일방안도 이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임. 북한동포의 자유·인권보장이든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과 같은 것이 그것임. 앞으로 이념적인 문제를 다룰때는 신중을 기해야 함.

둘째, 제도적인 면에서 의견수렴 차원에서 가칭 통일국민회의 같은 것을 두어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합의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봄.

교류문제에 있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함. 누구는 가개하고 누구는 못가개하는 모순을 제거하는 확고한 기준설정이 있어야 할 것임. 그 방안 선발시에도 선발기준을 명확히 해야함.

< 송 인 창 >

동양철학만이 유물사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철학으로 봄. 심정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좀 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입장에서 유물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면 좋겠음. 각 대학 통일문제연구소의 세미나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그리고 진보적 입장의 소리도 수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 정 기 돈 >

송교수가 말씀하신 동양철학은 통일문제연구 또는 통일철학원리로 타당한 것으로 봄. 우리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지도할 수 있도록 논리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에 대해 내실있게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람.

또한 공산국가에 갔다옴으로써 학생들과의 대화나 지도시에 설득할 수 있는 실체함을 갖게 됨. 공산권연수에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바람.

제 6 차 세 미 나



1. 일반사항

○ 일 시: 1989년 11월 13일

○ 장 소: 광주 (그랜드호텔)

○ 참석자 :

허광옥 (광주일보 논설위원)

장기웅 (무등일보 논설위원)

강신석 (무등교회 목사)

김호준 (광주YMCA 총무)

조봉래 (광주교육대 교수)

김광수 (전남대 교수)

박하일 (")

최영관 (")

변진홍 (호남대 교수)

오세성 (")

최봉기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문대근 (남북대화사무국 대화기획부)

2. 토의내용

< 조 봉 래 >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부정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음. 학생들은 무조건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음. 최근 UN가입에 대한 것이라든가 새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2개의 조선책동으로 치부하고 있음.

최근 북한학생 초청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자신있는 것은 TV, Radio의 상호 개방임. 방송매체를 100% 개방해도 될 것임. 이것이 북한의 개방과 동질성회복의 첩경이자 통일의 지름길임.

< 김 호 준 >

교회차원에서 통일의 저해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였음. 사실 그동안의 통일정책으로 보면 정부의 통일 의지가 없었다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 그동안 우리의 통일정책은 정책다운 것이 없었음. 통일에 대한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모두 잘못하고 있음. 서로 제안과 역제안을 계속하면서 싸워왔음.

통일의 원칙문제에서 민주라는 것은 함정이 될 수 있음. 그것은 공산사회나 자유체제에서의 민주는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임.

자주에 있어서도 외세배격은 함정이 될 수 있음. 통일원칙에서 민주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국민이 주체가 되는 내용이 없음. 현재 통일추진의 경우 주변국가 세력이나 또 남북한 내부의 위정자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함.

통일저해요인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방안이 되어야 함. 과정에 있어서 교류·개방이 있는데 우리 또한 정부에 의해 선택받은 사람이외에는 북한에 갈 수 없음. 이것은 자신감의 결여임.

동독같은 나라가 개방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개방에 인색함. 동독인들은 비판적 자성속에 통일을 위해 자기나라에서 산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에 가서 그쪽에서 살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을 것임. 따라서 과감한 개방이 필요함. 이질화된 남북체제에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류와 개방을 통해서만 가능함.

< 김 광 수 >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은 고려연방제에 있는데 새 통일방안에서는 민족대단결이 민주로 변화되어 있음. 여기서의 민주는 자유민주체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으며 교류에 있어서도 좀더 폭넓게 개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음.

또한 통일의 주체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 교류에 있어 너무 제한적으로 하지말고 넓게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음.

< 장 기 응 >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상호 일관성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체제 방식에 의한 통일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임. 따라서 남북연합에 의해서 통일이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임.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진 다음 영세중립화하는 방안으로 남북한의 체제연합을 바탕으로 남북평화연방을 이룩하는 방안은 어떤가?

칼 도이치의 말을 빌리면 국민소득이 3,000 불이 되면 통일의 길이 열린다고 함. 앞으로 10년후면 남한은 15,000불, 북한은 약 5,000불이 되어 민생민도 차원에서 통일에 희망적임.

주변정세가 긍정적이고 10년후면 김일성기도 늙어 북에는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한편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을 것임.

민생민도가 높아가고 북한의 환경변화에 의해 통일의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함. 통일의 저해요인과 관련 민생민도가 높아지면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임. 시간은 우리편이니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임.

기득권문제의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계층간, 지역간의 기득권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통일문제 해결 또한 되지 않을 것임.

사람은 소득이 있어야 함. 기회균등이 되어가는 쪽으로 가고 국내의 화합과 민주화가 진척되면 공산주의가 침투할 틈이 없게됨.

우리국민의 80% 정도가 중산층이 된다면 통일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박 하 일 >

통일에 대한 시각의 차가 크다는 사실은 여러 장에서 느낄 수 있음. 독일의 상황과 남북한의 상황은 다르다고 보는데 우리의 통일정책은 서독의 방식을 모방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독일의 경우는 외부의 제한과 간섭이 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사적 저항으로 결속력이 강함. 따라서 상호 교류·협력이나 통일의 길은 기습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서독이 동독에 많이 베푼 것의 축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음. 한반도는 6.25가 있었고 그 세대가 있는한 통일은 어렵다는 생각임. 그러나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우리는 예술단의 숫자만 따져 손익을 계산하고 있음.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이 좋을 것임. 새 통일방안 수립시 의견수렴을 많이 했다고 하나 국민 일부는 새 통일방안을 좋게 보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임. 통일정책방안의 의견수렴문제에서 4당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함으로써 그 정당성을 얻는 제도적인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허 광 욱 >

새 통일방안은 통일의 과정이 적나라하게 제시된 것으로 봄. 또한 적극적인 의견수렴도 된 것으로 보고 싶음.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학생들이나 일부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봄. 다시말해서 의견수렴을 거친 방안이 국민에게 거부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것임.

그것은 이상적인 영역만의 추구에서 온 것임.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 방안은 기독교의 의견이 잘 수렴된 것이라고 생각함.

또 한편으로 정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모든 정부정책에도 그렇게 되고 있음. 따라서 남북의 화합과 통일의 전단계를 위해서는 정치가 잘되어야 할 것임.

< 김 광 수 >

동서독과 비교해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에게서 볼 때 우리는 명분적인 접근이고 독일은 실질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임. 남북한은 유일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는 두개의 정권을 인정하고 있음.

통일에 있어서도 상호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남북한이 상호 유일합법정부임을 주장하고 대등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명분에 집착함으로써 우리는 걸돌 수 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출발에 문제가 있음.

< 장 기 응 >

동서독의 경우는 서독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고 있으며 지도자들이 주변국의 눈치를 보면서 장벽을 허물고 있음. 즉 국민의견을 핑계삼아 허물고 있음. 일부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다원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나 대화의 일원화는 필요함.

< 최 영 관 >

새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박선생이 말한 국민투표 방법에 의한 통일방안 확정문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임. 동구변화는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모르나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정부가 아무리 모든 통일방안을 내놓더라도 국민이 싫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 통일방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임.

우리 사회에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져 통일방안에 대한 국론통일이 이루어져야 함. 4당과 국민 모두가 제각기의 통일방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채널이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좋으나 단, 접촉에 있어서는 채널을 다원화하는 허가제나 신청제가 좋을 것임.

통일에 대한 국론통일과 과감한 교류·협력이 있어야 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음. 김일성사후 북한의 변화시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놓고 북한과 협상하면 좋을 것임. 그러나 통일정책에는 일관성이 필요함.

< 김 호 준 >

남쪽이 자신있다고 한다면 쌍방의 TV나 Radio를 개방하는 것을 전제조건화 하는 것이 필요함.

북한의 라디오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음. 상호 방송을 개방하는 것이 획기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하면 반공홍보가 필요없게 될 것임.

< 오 세 상 >

통일방안은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의지의 표현으로 볼 때 이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며 7. 7선언 이전에 통일방안이 나왔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음.

국민일부는 정부 위정자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정부는 이제 경제가 어느정도 됐으니까 통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실천하고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개폐해야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의를 믿고 신뢰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통일에 대한 정부의 방안이나 정책은 불신만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함.

지금 동독이 개방과 개혁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저항에 의해 정권자체가 붕괴될 위험에서 나온 것임.

그런점에서 볼 때 남북한 통일도 국민의 압력이나 저항에 의해 진정한 논의와 실천이 있을 것임.

지금의 통일논의는 일종의 허구임.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이러하데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임. 또 보안법을 그대로 놓고 교류·협력하고 통일한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없음.

따라서 통일을 위한 정치·사회적인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임.

< 변 전 흥 >

새 통일방안 천명후 국민의 여론이나 반응에 별 변화가 없음. 정권의 통일여지가 문제인데 이것은 언론이나 국민여론도 문제임.

정부와 국민의 매개기구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진정한 통일문화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힘써야 함. 그러한 기구나 테크닉이 필요함. 새 통일방안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어느 정도인지 또 기구들의 실험을 통해 어떻게 사회과정에 보내야 할 것인지 연구해야 할 것임.

여론기관은 전문가를 불러 말을 전하는데 주력하나 새로 형성하고 개발하는데는 부족함. 정부의 전략적 차원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변혁을 추구하는 전문가들의 대결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 길은 없음.

정부는 통일전략을 내세워 민족적 삶을 버리고 마찬가지로 민중론자들은 민족적 삶을 추구하고 통일전략을 버리고 있음.

양쪽의 전문가들이 대립된 입장을 대상화시키는 것을 버리고 합의해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

요즈음 학생들은 UN가입이나 교차승인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고 북한도 이에 대해 심각한 비난을 하고 있음.

UN가입이나 교차승인에 대한 홍보에 대해 학생들은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저항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 그러한 혼란은 언론기관이 장기적인 전략방법을 개발해야 Field가 마련될 수 있지 그저 방법론적인 접촉이나 교류·협력 등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장 기 응 >

매스컴의 본질은 창출이 아님. 창출은 학계가 맡아야 함.

< 김 광 수 >

언론은 계도기능도 있으니 나름대로 방법이 있을 것 같음. 학생이나 국민의 설득은 언론이 중요함.

< 강 신 석 >

통일은 정권차원이나 민족의 문제,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함. 통일원의 위상과 관련 통일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정권의 문제가 아닌 민족의 문제, 모두의 삶의 문제로 보면 좋겠음.

교류·대화창구의 단일화는 좋으나 못하게 하는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됨. 부정적인 단일화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문제임.

자주 만나게하고 주선하는 쪽의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음. 개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를 막아 놓고 통일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됨.

< 김 광 수 >

민주화없이 통일은 안될 것임. 통일에 앞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통일방안의 홍보는 좋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좋으니 어떻게 하겠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 굳이 홍보에 신경안써도 될 것임.

제 7 차 세 미 나

1. 일반사항

○ 일 시: 1989년 11월 14일

○ 장 소: 전주 (코아호텔)

○ 참석자 :

박동수 (전북대 교수)

박기영 (")

박세영 (")

신기현 (")

손기도 (")

김재영 (")

조준구 (")

유철종 (")

차용준 (전주대 교수)

신환철 (")

최봉기 (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문대근 (남북대화사무국 대화기획부)

2. 토의내용

< 유찰증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기존의 방안보다 더 좋으나에 대해서는 의문임. 새 통일방안은 애매한 감이 있음. 기존 방안은 순서가 정연한 편이었으나 새 통일방안은 긍정적이면서도 뜨거운 쪽에 가 있음.

한마디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있어 국민 일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임.

새 통일방안은 우파의 일부 사람들에 의한 어렵고 난해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됨. 쉽고 논리정연한 통일방안이어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통일론자의 입장에서야 모르나 일반국민이나 학생들이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

새 통일방안의 단계는 대단히 어렵고 난해하여 거의 모든 국민에게 Feeling 이 오지 않음. 기본 해설자료 역시 어려움.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자료를 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음.

< 신 기 현 >

해마다 나오는 방안이 통일방안임. 도대체 일관성이 없음. 북한에 뒤지고 열세적인 입장인 것 같음. 우리의 체제연합이나 공동체는 뒷북이나 치는 것이 아닌가 함.

통일문제에서 한국이 딜레마에 있다는 일반의 시각이나 이론을 해소할 방안이 없는 것 같음.

이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충돌때문에 그런 것임. 동서독은 상호 별개 국가이나 남북한은 그렇지 못함. 즉 유일합법정부론이 그것임. 국제적으로는 대등한데 국내적으로는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각기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기인한 것임.

위정자들의 의식속에 이러한 생각이 해소되지 않는 한 그 해결이 곤란할 것임.

북한은 민족해방차원의 생각이 그대로 있음. 그러한 점에서 새 통일방안에서의 국민 대표수의 동수개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임.

최근 한국입장에서는 공세외교를 펼칠 수 있는 상황임. 그러나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거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공세외교 측면에서는 모르나 북한이 문을 닫게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됨.

새 방안은 위성자들이 나서서 정상외교를 추진해야하나 그들은 서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있음. 고려연방제도 남한의 붕괴요소가 있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임. 북한에 대해 공세적이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 동서독의 경우에 비해 잘 평가해야 할 것임.

< 신 환 철 >

새 방안이 이론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봄. 그러나 일관성이 문제임. 동서독의 경우 점진적인 개방이 전개되었고 여기에는 서독의 자신감이 크게 작용하였음. 그러나 지금 남한은 말뿐이지 분명히 자신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음. 예술단 숫자를 놓고 싸우는 데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없느냐 하는 것임.

통일방안에서 북한이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우리도 북한내부의 제도적인 문제를 전제조건화 할 필요가 있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연구할 수 있는 체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통일이 가능할 단계에 와 있을 때 이질화문제에 부딪치지 않고 남북이 통합될 수 있는 구조가 창출되어야 할 것임. 그러한 사회, 정치, 경제 구조가 정비되지 않았을 때 통일은 불가능하고 통일방안도 하나의 기법에 불과함. 한편 북한에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함.

< 조 준 구 >

통일방안의 의견수렴과정은 평가할 만한 것이었음. 또한 과도적 체제로 남북연합을 설정한 것도 적절했다고 생각함. 그러나 전제조건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전제조건을 붙이는 것은 통일의지에 의문만 제기할 뿐임.

일관성의 문제에 있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새 통일방안이 나오는데 그래도 북한의 연방제는 1인 장기집권에 의한 것 일지라도 일관성이 있음.

사실 우리 통일방안의 근본바탕이 똑 같은데 정권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임. 이것은 새 통일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강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줄속이 될 가능성도 있음.

통일방안은 수정이 되면서 긍정적 연구가 계속 있어야 겠지만 방안이 청사진이나 선언이 아닌 좀 더 실천적인 내용이 필요함.

기존의 10개 시범실천방안의 내용을 하나 하나 실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통일은 하나 하나 실천함이 중요한데 방안 뿐이고 실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일각에서 정부의 통일의지가 없다고 보는 소이가 거기에 있음. 통일은 국내정책적인 문제도 되는데 국민적 화합과 안정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는 통일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

동서독의 경우와 비교해 근본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부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봄. 이것은 북한의 위기감으로 생각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될 수 있음.

주변여건은 현상유지를 바라는 강대국들에 의해 어느 한쪽에 치우친 통일은 어렵게 되었음.

북한에 대해서 협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형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양보하는 자세로 주고 받는 (Give and Take) 것이 아니라 주는 입장에 서서 좀 더 큰 것을 얻기위해서 큰 목표를 가지고, 알고서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함.

< 차 용 준 >

통일원칙문제에 있어 자주, 평화는 남북이 같으나 민주와 민족적 대 단결이 다르고 이것을 못박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봄. 말 자체는 거부감을 주지 않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큰 차이점과 근본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자주문제에 있어 분단과 현상이 비자주적인데 통일은 자주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문임. 따라서 월남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주는 한반도에서 기적을 창출하는 것이라 생각됨.

평화의 원칙도 같은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을 한 예가 없다는 점에서 기적을 창조하거나 장기화시킨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민주라는 것은 영영 통일을 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음. 통일은 이념을 초월해야 가능한 것인데 자유민주체제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북한이 이념을 포기하지 않는한 통일은 불가능함.

통일원칙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정책창구 일원화 문제에서 개방을 위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 폐쇄시키고 있음. 우리가 정말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대범하게 대해야 함. 북한은 자신있게 나오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그 쪽으로 가면 무슨 큰 일이나 일어날 것처럼 하고 있어 북한이 폐쇄체제라는 말에 의문이 가게 만들고 있음.

북한의 실상을 솔직하게 개방하는 것이 필요함. 자신있고 개방적이라면 좀 더 과감한 정책전환이 있어야 함. 솔직한 정책이 없기 때문에 불신을 받고 통일방안 역시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음.

< 박 동 수 >

제7공화국이 새로 들어섰을때 새 통일방안이 나온다 해도 이와 비슷한 방안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임.

새 통일방안이 국민의 통일방안이라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음. 4천만 국민이 원하는 방안이라면 이러한 홍보가 필요없을 것임.

지금 동서독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관용이나 유연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함. 서독의 통일을 위한 양보와 노력에 의해 획기적 사건이 일어난 것임.

우리는 자신감이 없음. 예술단 숫자문제 싸움에서 볼 때 그러함. 정말 대형의 입장이라면 양보해야 하며 그런데서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미시적 입장이 아니라 거시적 입장에서의 정책전략이 있어야 함.

통일을 생각할 때 당연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화임. 민주화없이 통일을 없을 것임.

< 조 순 구 >

북한의 민주화 요구에 앞서 우리가 민주화되어야 상대방이 변화할 것임.

< 박 동 수 >

통일은 서로 교류를 통한 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임.

< 유 철 중 >

그런면에서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넣은 것은 문제임.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남북한의 심리전 양상이 달라 문제임.

< 박 동 수 >

새 통일방안은 야당의 방안도 포함된 것 같음. 그러나 동서독의 현 상황과 같은 상황이 남북한에 도래했을 때 만이 동 방안의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음.

남북연합은 북한이 거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방법보다는 나은 것임. 양보와 협조의 차원에서 자존심이나 감정차원의 문제가 있으니까 비정치적인 문제에서 접근되어야 함.

북한이 통일에 대비한 작업을 계속해 왔다고 볼 때 우리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쓸때가 되었다고 봄.

< 박 기 영 >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첫째, 통합단계에 있어 독일은 경쟁, 협조 단계에서 통합단계로 온 것 같음. 통일의 단계는 ① 해야한다는 명분인지 단계, ② 하자라는 합의 창출 단계, ③ 통합성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단계가 있다고 보는데 새 통일방안은 3번째 단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실천성이 문제가 됨.

둘째, 통일의 영향변수에 있어 국제적 측면의 내용이 없어 아쉬움. 그리고 대북 설득의 내용도 필요할 것임. 지금까지의 통일정책은 안보적 측면에서 다루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고 있음. 남한정부가 계속 얻어 맞을 경우는 거짓말했을 경우와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임.

마슬로우의 욕구충족 5단계론에 의하면 북한도 곧 다른 차원의 욕구에 의해 개방이 불가피할 것임. 북한이 지금의 먹고 입는 것이 해결되면 좀 더 높은 단계의 욕구충족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정책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임.

현재의 동서독을 볼 때 비애를 느낌. 서로를 감싸는 정책이 필요함. 고향방문단이나 수재물자 제공시 북한을 비난하고 헐뜯는 행태는 이제 버려야 함.

< 조 순 구 >

통일은 민족통일이 된다는 것이지 국가통일이 된다는 의미가 아님.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개념이 다름.

< 박 세 영 >

우선 통일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비판이 나왔을 것임. 새 통일방안 내용의 용어에 있어 추상적인 내용이 많이 있음. 또한 통일방안의 변경요인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함.

통일방안은 반드시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 구체성이 필요하고 나아가 제안의 거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일시적인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보지 않음. 여러 차원의 대화가 축적되어야 정상회담의 효과가 있을 것임.

북한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보다 나은 사회를 추구할 것임. 이에 대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김 재 영 >

남북협상이 잘 이루어져 통일된 방안이 나왔을때 자주, 평화, 민주적 방법으로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을까는 의문임.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홍보방안이 아닌가 생각됨.

통일원이 다른 부처와 관계에서 조정능력이나 통합능력이 없는 것 같음.

지방자치에 있어 분권화,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통일한국에 있어서도 분권화, 민주화가 자기이익과 기득권에 의해 상호 조정과 통합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임. 그런 점에서 통일방안은 홍보와 현실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음.